

전주시, 일자리창출 정책 5년 연속 우수상

일자리목표 공시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주시가 추진해온 각종 일자리창출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31일 서울 COEX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6 전국 지자체 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2015년 일자리목표 공시제 정부합동평가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정부합동평가로 시는 2011년 평가 이후 5년 연속으로 '우수 자치단체' 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상 수상과 함께 9,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받게 됐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실천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241개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일자리 계획과 집행, 성과를 종합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지역고용 여건 하에서도 △탄소산업 구축을 위한 탄소 기술교육센터 및 탄소복합소재 창업 보육센터 운영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1000만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일자리 5000명 창출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모내기 바쁜 농민

초여름 더위가 기승인 지난달 31일 김제 민경 평야의 광활한 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형 사회경제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주도시혁신훈터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청년고용 절벽에 따른 전주시의 적극적인 청년 고용활성화 일환으로 청년소통을 위한 청년소통담당을 신설, 매월 청년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청년일자리 창출 TF팀 구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등 단계적의 의지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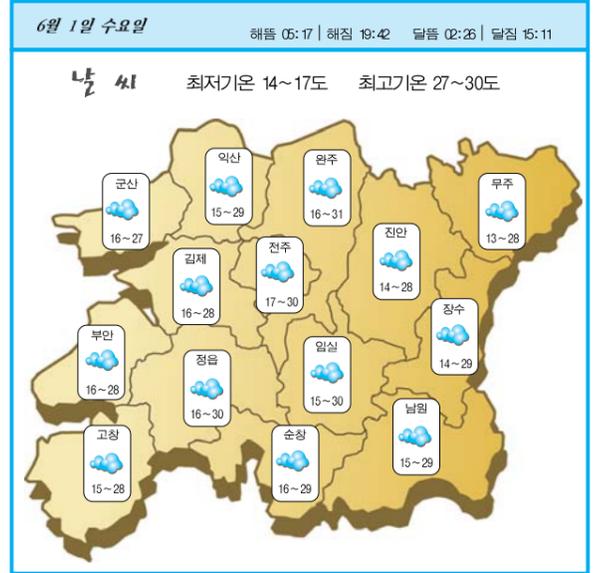
시는 지난해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1만374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총 1만4433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000만 관광객, 관광일자리 5000개 창출을 목표로 관광분야 일자리창출과 청년층 고용을 향상을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노인 및 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일자리사업 확대에 주력해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내 문화자원과 탄소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투자유치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비전대-군산교육청 자유학기제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와 군산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이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을 31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체험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 사항은 ▲진로교육을 위한 정

보 제공,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제안 및 운영 지원, ▲학과 체험 및 현장실습 지원, ▲학생 특강 및 기관 견학 지원 등이다.

한영수 총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오늘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공공기관 등이 전북대학교에서 합동 채용설명회를 연다.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 이전 공공기관 6곳과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지역기관 8곳, 전북대 등 6개 대학 등 22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채용설명회의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고민형기자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12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등을 일부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 고교 학비로 올 1분기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 위소득 64% 이하자 등이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입학금이 총 340만원, 수업료 1억70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10억원가량이다.

/고민형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 철회 도민 기만한 것”

“철회 방침 고수할면 제품 불매운동 등 강력대응”

전주시의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 철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삼성이 전북도민과 약속한 새만금 사업 투자를 끝내 철회할 경우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삼성 제품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장과 전북도지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새만금에 7

조6000억원대 투자를 약속했다.

이 협약을 통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따른 신사업 투자 여력 부족으로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실리에 따른 투자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노선사 분

산배치 약속 반복과 맞물린 정치적 보상의 의미가 담긴 투자 약속이었다”며 “전북도와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투자계획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사업을 미뤄왔던 삼성의 일방적 투자 철회 통보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3조원의 투자로 매년 15조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800억원의 세수 5만여명의 고용 효과를 장담한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 약속이 이렇게도 쉽게 백지화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고 입장을 가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약속한 MOU가 현실처럼 버려진다면 국민들이 정부와 기업,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믿을 수 있겠나”

며 정부와 지자체, 삼성의 무책임한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삼성의 일방적 새만금 사업 투자 철회 통보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이제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삼성의 투자약속이 전북도민을 달래기 위한 역대 정권의 눈속임은 아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삼성의 투자약속 이행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삼성이 전북도민을 우롱한 새만금 투자약속 철회 방침을 고수할 경우,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삼성 제품 불매운동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